

“마스크 싸게 팝니다” 1억여원 가로챈 30대 구속

전국적인 마스크 품귀현상 일자 인터넷 직거래사이트에 글 올려 8명 피해...생활비·도박에 탕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자 이를 악용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 등을 저렴하게 대량으로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35)씨는 최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KF마스크'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대량으로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8명으로부터 1억1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다. 지난 6일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와 관

련한 사회적 심각성을 감안해 피해 방지를 위해 즉각 수사에 나섰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 추적,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해 경기도 동두천 시 소재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금액 대부분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A씨는 마스크 제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이버공간에서 전국을 무대로 한 범행인 점을 감안해 다른 경찰서의

피해신고에 대한 여죄 수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인터넷 개인 간 직거래는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는 특성을 악용한 인터넷 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대금지급 전에 해당 업체의 계좌번호, 세금계산서 등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대

금이 많은 경우는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갑 모바일앱 등을 통해 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기울여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봉술기자 kbc78@ksilbo.co.kr

초교 교사 3명 ‘잠복결핵’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3명이 전염성이 없는 ‘잠복결핵’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매년 한 차례 진행되는 잠복결핵 검사에서 교사 3명이 잠복결핵 판정을 받았다. 잠복결핵은 아무런 증상도 없고, 발병한 것도 아니며 전염성 역시 없는 상태다. 다만 전염성이 있는 결핵환자의 접촉자 가운데 약 30% 정도가 잠복결핵감염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술기자

‘중구 B-04 보상 질의’ 국토부 유권해석 논란

대책위 “원하는 답변 얻었다 구청장 사과할 때까지 집회”

중구 “답변에 법령해석 전문질의 자체가 잘못...의미없어”

최종 결정은 지도위서 내릴듯

울산 중구 B-04(북정·교동) 재개발 사업 보상 절차 문제 여부를 놓고 현금청산대책위의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두고도 논란이 일어 사태 해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책위는 “원하는 답변을 얻었다며 구청장이 사과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중구와 조합 등은 “질의 자체가 잘못됐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현금청산대책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감정평가업체 추천 관련 질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질의 요지는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의 위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을 적용, 토지 등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다. 국토부는 답변서에 “질의의 경우가 2018년 2월9일 이전에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 등이 청산금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관련 시행령과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고 시점이야 어떻게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상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답변을 검토한 중구 등은 질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해당 문제의 요지는 조합 측이 진행한 보상 절차가 맞는지, 아니면 대책위가 주장하는 보상 절차가 맞는지 여부다. 즉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를 법률

해석으로 판단하기 위해 질의를 해야 하는데 대책위가 질의한 건 ‘개정된 도정법 시행령이 무엇인지’라는 거다. 즉 B가 무엇이고 질의는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다는 게 핵심이다. 중구 관계자는 “질의 자체가 시행령이 뭔지 묻고, 원하는 답변을 받기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질의할 할 거면 추진 경과를 설명한 뒤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물어봐야 하는데 답변 자체에는 법령해석이 하나도 없다. 유권해석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양 측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결국 이에 대한 결정은 울산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B-04 조합은 지난달 10일 울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재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은 현금청산자 측의 조속재결 요청에 지난해 11월 지도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나 지도위는 협의금액 미제시에 따른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책위는 19일에도 집회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세홍기자



아기돌고래 ‘고장수’ 울산시민에 첫인사. 울해로 태어난지 만 2세가 된 피마돌고래 ‘고장수’가 18일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서 열린 고래생태설명회에서 ‘고장수’가 힘찬 점프를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폐국 1호 대상’ 반구우체국 4개월 연장 운영

반대 서명운동·노조 반발 영향 6월께 6곳 폐국 여부 관심집중

우정사업본부의 경영합리화 방침에 따라 ‘전국 폐국 1호’가 유력했던 울산 중구 반구동우체국의 운영기간이 약 4개월 연장됐다. 주민들의 반대 서명운동과 노조 반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돼 오는 6월께 최종 결정될 반구동 포함 울산 6곳 우체국의 폐국 여부가 관심이다. 18일 부산지방우정청과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울산지역 폐국대상 우체국은 중구 반구동, 울주군 상북·진하

해수육장, 남구 신정동, 동구 남목동·현대중공업 등 6곳이다. 이 중에서 중구 반구동과 동구 남목동, 현대중공업지점은 유상임차 지점으로 폐국 대상 선정 가능성이 높다. 우정사업본부가 폐국 대상 선정을 유상임차 지점을 우선 추진하고 경영수지, 우편매출액 등 점수를 매겨 낮은 지점부터 선정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사무실 임대기간이 3월 중순까지였던 반구동은 전국 첫 번째 폐국이 유력했지만 노조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본보 지난 2월4일 6면)로 최근 계약을 연장하며 6월말까

지는 운영된다. 그러나 남구 신정동, 동구 남목동 등 지점 폐국 검토 대상의 지역 역시 주민 반발이 우려된다. 실제 동구의회는 최근 남목동 등 2곳의 우체국 폐국 추진 관련 동울산우체국을 찾아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경영합리화 대상 우체국(폐국 후 취급국으로 전환)으로 최종 확정되면, 금융서비스는 종료되고 우편서비스만 제공하게 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과 민원이 우려된다. 노조는 여전히 우체국 폐국 저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당초 폐국 대상 지점 선정 기한을 지난 10일에서 3월말까지로 미루는 등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정세홍기자 aawe0812@ksilbo.co.kr

연양읍 돈사 폐수처리장서 불

지난 17일 오후 8시18분께 울산 울주군 연양읍의 한 돈사 축산폐수처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폐수처리장 건물과 내부 설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82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40여분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폐수처리장이 축사와 10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있어서 돼지들의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세홍기자



지난 17일 오후 8시18분께 울산 울주군 연양읍의 한 돈사 축산폐수처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